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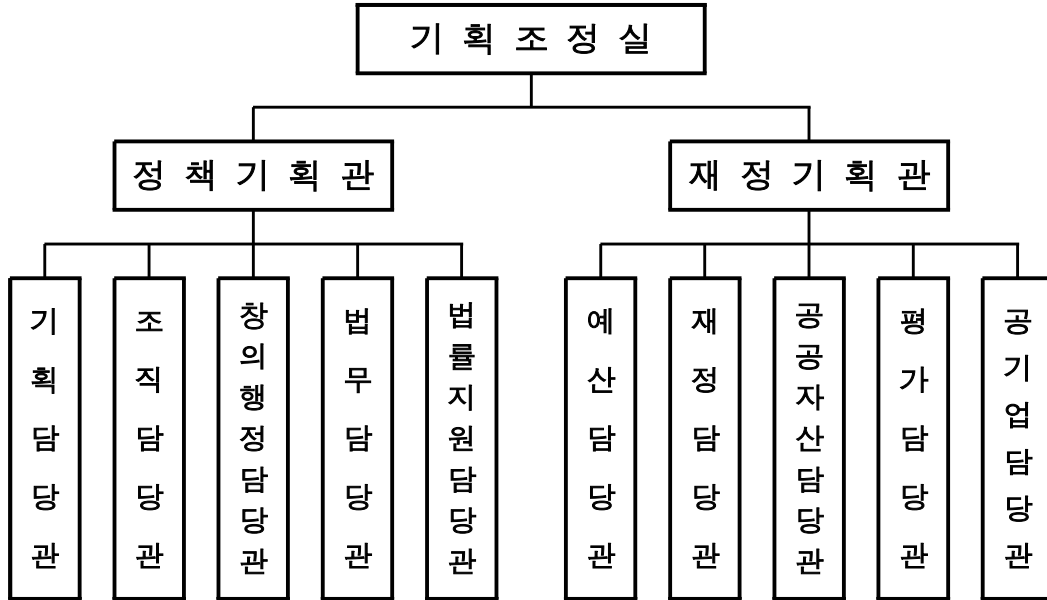
# 주요 업무보고

2023. 2.

기획조정실

# I. 일반 현황

**조 직** 1실, 2관, 10담당관, 49팀, 1직속기관 · 2출연기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6처 8대학 10대학원)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8실 2센터), 서울기술연구원(3본부, 8실, 3센터)

**인 력** 292명/267명(정원/현원)

(’23. 2. 10.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292 / 267 (153)	254 / 236	32 / 25	6 / 6
기 획 담 당 관	42 / 38 (17)	34 / 35	6 / 3	2 / 0
조 직 담 당 관	32 / 30 (15)	31 / 28	- / -	1 / 2
창 의 행 정 담 당 관	22 / 22 (13)	22 / 20	- / 1	- / 1
법 무 담 당 관	26 / 24 (14)	23 / 21	2 / 2	1 / 1
법 률 지 원 담 당 관	32 / 26 (15)	14 / 11	18 / 14	- / 1
예 산 담 당 관	40 / 39 (29)	38 / 37	1 / 1	1 / 1
재 정 담 당 관	32 / 29 (16)	31 / 28	1 / 1	- / -
공 공 자 산 담 당 관	12 / 11 (3)	10 / 9	2 / 2	- / -
평 가 담 당 관	33 / 28 (17)	32 / 28	- / -	1 / -
공 기 업 담 당 관	21 / 20 (14)	19 / 19	2 / 1	- / -

※ 괄호 안은 여성공무원수

##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정 현안사항 기획·조정</li> <li>○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 총괄, 공약 총괄 관리</li> <li>○ 시정백서·현황 작성,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li> </ul>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li> <li>○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 업무 총괄 조정</li> <li>○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 관련 사항 등</li> </ul>
창의행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행정 기획, 과제 발굴, 확산에 관한 사항</li> <li>○ 시정연구, 시립대 운영 지도·지원, 연구원 지도·감독</li> <li>○ 학술용역, 인구변화 대응 및 도시경쟁력 지수 관리</li> </ul>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li> <li>○ 자치법규 입안 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li> </ul>
법률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및 위·수탁 협약서 심사</li> <li>○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li> </ul>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li> <li>○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li> </ul>
재 정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기금운용 총괄</li> <li>○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li> </ul>
공공자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검토 및 활용계획 수립</li> <li>○ 공유재산 위탁개발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li> </ul>
평 가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주요사업·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li> <li>○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li> <li>○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li> </ul>
공기업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 모니터링</li> <li>○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li> </ul>

## 예산 총 4조 5,681억원(본예산 기준)

###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3.2.10.)

구분	2022년 (사업수)	2023년 (사업수)	증감
합계	3,008,447 (47)	4,568,060 (47)	1,559,613
일반회계	666,281 (45)	725,339 (47)	59,058
특별회계	243,529 (2)	263,060 (-)	19,531
기금	2,098,637 (-)	3,579,661 (-)	1,481,024

### ○ 일반회계 : 총 7,253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3.2.10.)

구분	2022년 (사업수)	2023년 (사업수)	증감
합계	666,281 (45)	725,339 (47)	59,058
기획담당관	1,235 (4)	1,005 (4)	-230
조직담당관	1,265 (3)	1,765 (3)	500
창의행정담당관	127,914 (9)	92,726 (10)	-35,188
법무담당관	697 (3)	699 (3)	2
법률지원담당관	7,766 (2)	7,137 (2)	-629
예산담당관	289,322 (3)	274,831 (3)	-14,491
재정담당관	235,156 (13)	342,895 (9)	107,739
공공자산담당관	- (-)	1,202 (5)	1,202
평가담당관	2,131 (4)	2,142 (4)	11
공기업담당관	795 (4)	937 (4)	142

### ○ 특별회계 : 총 2,631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3.2.10.)

구분	2022년 (사업수)	2023년 (사업수)	증감
예산담당관	243,279 (-)	263,060 (-)	19,781
공공자산담당관	250 (2)	- (-)	-250

### ○ 기금 : 총 3조 5,797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3.2.10.)

구분	2022년 (사업수)	2023년 (사업수)	증감
합계	2,098,637 (0)	3,579,661 (0)	1,481,0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587,096 (-)	1,758,938 (-)	171,8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11,541 (-)	1,820,723 (-)	1,309,182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 II. 정책 목표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① 일하는 방식·제도 혁신으로 시정성과 뒷받침

②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③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④ 인구변화 대응 및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 III.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 1. 일하는 방식·제도 혁신으로 시정성과 뒷받침

- ①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한 성과 및 활력 제고
- ②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
- ③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④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및 실적 관리
- ⑤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 2.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 ①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 개선 추진
- ②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 ③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운영
- ④ 적극적 법률 지원체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① 주요 재정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② 지방채 적정 발행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 ③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 4. 인구변화 대응 및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 ①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시정 전략 마련
- ② 미래 공공기여의 전략적 용도 선정체계 마련
- ③ 노후 저활용 시유자산의 선제적 활용방안 마련

# 1. 일하는 방식 · 제도 혁신으로 시정성과 뒷받침

① 효율적 조직 · 인력 운영을 통한 성과 및 활력 제고

---

②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

---

③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④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및 실적 관리

---

⑤ 투자 · 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

# 1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한 성과 및 활력 제고

민선8기 시정 주요사업의 본격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 동결 기초 하 체계적·효율적 조직 운영 도모

## □ 추진방향

- 민선8기 조직개편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주요사업 본격적 추진기반** 구축
- 조직·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 □ 추진계획

- **핵심과제 실행 위한 조직보강** 및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조정·재배치
  - 직무분석·조직진단 등 통해 조직개편 수요 발굴
  -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서울’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재난안전 기능 보강) 등
-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 위해 **정책기획 기능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
  - 단순집행·현업보다는 정책기획·조정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급체계 구축
  - 중간관리층 확대(피라미드형 → 항아리형)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력 제고
  - ※ 현재 **市 5·6급 정원채정 기준(49%)**은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 평균(53.6%)에 비해 낮은 수준
  - 직급체계 연구용역('22.10.~'23.5.)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원채정 기준** 마련

### 【 수도권 3개 시·도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23.1월 기준) 】

비율	4급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경력관
3개시·도 평균	4.5%이내	17.2%이내	36.4%이내	35.7%이내	5.2%이상	1.0%이내
서울시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0.5%이상	1.5%이내
경기도	5.0%이내	20.0%이내	38.8%이내	34.7%이내	1.0%이상	0.5%이내
인천시	5.0%이내	17.0%이내	36.0%이내	37.0%이내	4.0%이상	1.0%이내

※ 수도권 3개시·도(서울경기·인천)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채정 기준(연구직·별정직 등 제외)

## □ 향후일정

- 직급체계 개선 학술용역 중간보고(2회) : '23.1월~3월
- 조직개편안 마련 및 학술용역 준공(5월) : '23.3월~5월
- 시의회 협의 및 조례 개정 : '23.상반기



## 2

#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맡은 바 직무를 다하는 창의행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

## □ 추진배경

- 기존 사업에 대한 효과성 진단 등 재점검 없이 매년 신규사업 발굴·추진으로 업무 누적 과부하 및 직원 부담 가중
- 그동안 지나쳤던 시민들의 다발성 민원, 제안 등을 되돌아봄으로써 서울시정을 이행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에 우선 집중

## □ 2023 동행·매력의 ‘창의행정’ 전략

### ‘창의행정’의 개념 정립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모든 활동

창의행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도록 개념 정의

- 불필요한 업무 확실하게 폐지 → ‘창의행정’의 동력 확보
- 내 업무에서, 그동안 지나쳤던 시민들의 개선 의견부터 되돌아보기
-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시키는 체계 구축
- 조직 내 의사소통과 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리더십 향상
-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충분한 창의행정 성과 보상 시스템 구현

## □ '23년 추진계획

- 행정서비스 개선 여력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일버리기('23.1월말~3월)
  - 직원 개별 의견수렴, 실본부국 조직단위 진단·발굴, 기획조정실 심층 분석을 통한 사업폐지 대상 자체 발굴

### 【 일버리기 과제 발굴 기준 】

- ① 투입(인력·예산) 대비 효과 낮은 사업 ② 유사기능 중복 등 통폐합 필요 사업
- ③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④ 일반시민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업
- ⑤ 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 대상 사업 존속·폐지 실익 검토 및 사업폐지 심의·의결(일버리기TF\*)
- \* 일버리기TF :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부서장(창의행정·기획·조직·예산·평가·감사)
- 소관 실본부국에 심의 결과 통보 및 폐지 협의 후 폐지 실시

- 일상 속 시민 불편사항 집중 점검 및 개선('23.2월~3월)

- 그동안 제기된 시민 민원·요구사항들을 토대로 각 팀·부서별로 심층 진단실시 후 즉시 개선 또는 시민 서비스 개선대책 마련

### 【 중점 점검대상 선정 기준 】

- ▶ 시민생활 밀접분야, 불편 민원이 많았던 사항으로 개선 시 시민 편익 증대가 큰 사항
- ▶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가능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조치가 가능한 사항 중심으로 발굴(계절적 시급성, 약자 배려 등 고려)

- 시민 불편사항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은 기획조정실 주관 원스톱 지원
- \* 부서 간 이견, 예산 및 정원 배정, 법령 및 제도개선 등
- 개인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자·기관 포상 병행 등 우수사례 성과보상 제공

- 업무개선 아이디어 상시 발굴·지원 체계 구축 및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

- 행정포털 바로 노출 및 현 지식공유시스템 개선으로 직원 참여 확대
- 아이디어 개발·보완 연구비 지원 및 실현 가능 우수 아이디어 분기별 채택
- 우수사례 성과 공유(유튜브 등 활용) 및 제안자 금전·인사보상 등 부여

### 3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남설 등을 방지하고 부패 예방을 위한 상시 지원 등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 추진방향

- 정책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불요·불급 사무 지속 조정
- 합리적인 예산·회계 관리기준 정비, 교육 및 컨설팅 체계 구축

#### □ '23년 추진계획

- '23년 민간위탁 사무 현황 : 377개 사무, 예산 7,155억원

(단위 : 건, 억원)

계		예산지원형						자립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 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77	7,155	360	7,036	275	6,172	85	864	17	119
		95.5%	98.3%	72.9%	86.3%	22.5%	12.1%	4.5%	1.7%

- 관행화비효율 우려가 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전면 재검토 및 조정
  - 기존 사무는 업무중복, 사업성과, 업무효율성 및 위탁적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운영방식 전환(직영, 보조 등) 및 사무종료
  - 신규 사무는 다른 방식의 수행 가능성 및 효율성(예산·인력 등) 심의
- 수탁기관 회계비리 척결 등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및 상시 지원
  - 예산편성기준 정비 및 회계감사 대상 확대 등 예산·회계 기준 명확화, 투명성 확보
  - 회계·노무 분야 사무별 전담 전문인력 배치로 사전점검 및 상시 컨설팅

#### □ 향후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7회) : '23.1월~9월
- 회계감사 및 종합성과평가(교육 및 현장 컨설팅 포함) : '23.1월~12월

## 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및 실적 관리

국가위임사무 등 전국 공통사무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를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市의 우수한 시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시정 신뢰도 제고

### □ '22년 합동평가 결과

- 평가분야 : 5대 국정목표\* 116개 지표 ※ 서울시 해당 평가지표 100개
  - \*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 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평가방법 : (정량평가) 지표별 목표치 달성 여부, (정성평가) 지표별 우수사례 선정
- 평가결과
  - (정량평가) 80개 지표 중 60개 달성 (목표 달성률 : 전년 70.8% → 75%로 상승)
  - (정성평가) 20개 지표 중 2개 우수사례 선정 ※ '20년 6개 선정
  - 국민평가단 선정 5개 우수사례 중 우리시 2개 선정 ※ 8개 특광역시 중 최다

### □ '23년 합동평가 계획

- '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 : '23.1~4월
  - (정량) 중앙부처의 최종실적 확인 및 부적정 실적에 대한 이의신청(2월)
  - (정성) 합동평가단의 성과·실적 증빙자료 검증 및 현장실사 대응(2월)
  - 정부 합동평가단 최종 검증 및 국민평가단 우수사례 평가(3월)
    - ⇒ 최종 평가결과는 '23. 4월말 행안부 발표 예정
- '24년('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수검 준비 : '23.5월~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4년 합동평가 대비 수검전략 및 계획 수립(5월)
  - 정량 실적(목표 달성도) 연중·수시 관리, 실적 미진지표 집중관리(10~12월)
  - 市 정책 우수사례 확대를 위해 외부전문가(자문단) 자문 및 컨설팅(9~12월)

### □ 향후일정

- '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 및 결과 분석 : '23.상반기
- '24년('23년 실적) 평가 대비 계획 수립에 따른 실적 관리 : '23.하반기

## 5

# 투자 · 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시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 출연기관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 □ 추진방향

- 효율적 조직 구축, 재무건전성 제고,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등 중점 추진
- 외부전문가 자문·컨설팅, 혁신성과 점검·공유로 지속적 자체 혁신 유도

### □ 추진내용

#### ① 효율적 조직 구축

##### <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주요 의결사항('22.12.23.) >

- (대상·방식) 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은 즉시 통합,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은 우선 자체 혁신 후 6개월 후 재판단
- (통합방향) 기존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감안해 통합 시 고용승계
- (추진일정) 세부통합(안) 마련(~4월), 조례 정비(~6월), 해산절차 이행(~11월)

- (통합) 즉시 통합기관은 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통해 세부적 통합(안)을 마련하고 해산 등 절차 이행하여 통합완료(~'23.11월)
  - 통합TF(서울안기술연) 또는 연구용역(공공보건의료원)으로 세부통합설계 마련 중
  - 비전, 조직인사체계 등 세부통합설계안 마련 과정 중에 직원 의견수렴 등 진행

##### < 서울연구원 · 서울기술연구원 통합 방향 >

- (비 전) 통합연구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로운 비전 설정
- (조직체계) 융·복합 연구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통합적 조직 재설계
- (인사체계) 양 기관간 상이한 인사·보수체계를 합리적이고 단일 체계로 통합·조정
- (조직문화) 화학적 통합 조기실현을 위해 통합 전부터 기관간 교류 활성화

- (조직·인력) 시정 역점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인력 재배치
  - 행안부 가이드라인 반영하고,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여부 수시 점검

## ② 투자출연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 (부채관리)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 공공 기관(8개\*) 향후 5년간 재무·부채관리 계획 수립 운영

\* <투자기관> 교통·SH·농수산·에너지, <출연기관> 신보·의료원·세종·복지

- (비핵심자산 매각)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청사 면적 최소화 등

## ③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 사내대출 이자율, 과도한 휴가 등 개선 필요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합리적 조정

- 기관별 이행계획 제출(~2월), 이행 미흡시 주기적 보완 요청, 수시 점검

## □ 혁신 이행계획

- (외부전문가) 운영심의위원회, 컨설팅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 활용
  - 운영심의위원회 통해 기관 세부통합설계안 및 자체혁신방안 등 심의
  - 기관별 조직 혁신 애로사항 및 중장기 재정전망, 회계이슈 등 자문컨설팅
- (수시점검·확산) 혁신 보고회, 기조실 주재 회의 등을 통해 성과와 진행 현황을 수시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분위기 확산
  - 운영심의위원회(4월/6월), 기조실 주재 회의(분기별), 혁신보고회(10월)
- (자발적 혁신 유도) 각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에 혁신 성과를 반영하여 기관 스스로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기관 경영평가에 주요 현안과제 평가 항목 신설(10%)
  - 출연기관장 성과계약에 혁신 성과분야 비중 확대(13%→20%)

## □ 향후일정

- (효율적 조직구축) 기관통합 절차 완료 : ~'23.11월
- (재정건전화) 이행여부 수시 모니터링 : '23.1월~
- (복리후생 조정) 이행계획 제출 및 조정 : '23.2월~

##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①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 개선 추진

---

②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

③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운영

---

④ 적극적 법률 지원체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

# 1

## 시민이 체감하는 법령·제도 개선 추진

시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 개선과 불합리하게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행태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 '22년 추진실적

- 민생경제, 주택건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제도 개선
  - '20~'22년 발굴한 개선과제 373건 건의, 274건 회신, 91건 수용

#### 주요 개선 사례

- 「하천법」 개정('23.1.) :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 동물(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천점용허가 가능)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23.1.) :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50%에서 30%로 완화하여 주택 재건축 활성화

### □ '23년 추진계획

- 주요 국정·시정 과제와 연계, 핵심과제의 적극적 발굴·건의
  - 신산업 육성, 시민안전 강화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세감면 혜택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실질적 자치경찰제 실현(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 장기 미해결과제 등은 소관부처 외 국회·국무조정실 등과 협조 추진
- 수도권 역차별 규제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건의
  - 저성장 인구축소시기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도권 규제 개선 추진
    - ※ 국내외 여건 변화 및 해외 주요 도시 규제 완화 사례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 실효성이 높은 그림자\*·행태규제\*\* 적극 발굴·개선
  - 그림자·행태규제 발굴 회의, 시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과제 발굴
  - 개선완료 후 필요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자치구 홍보 등 진행
    - \* 그림자규제 : 행정계획과 같이 법령은 아니어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시민생활을 구속하는 사실상의 규제
    - \*\* 행태규제 :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로 인해 기업 등의 자유와 창의가 저해되는 사실상의 규제

### □ 향후일정

-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건의(분기별) : '23.3월~12월
-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 '23.3월~12월



## 2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시민지향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 '22년 추진실적

- '22년 회의운영 실적: 총 24회 개최 / 총 716건 재결

행정심판 운영 실적 (2022년, 단위: 건)	재결건수	인용	기각	각하
	716	117(16%)	420(59%)	179(25%)

### □ '23년 추진계획

-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한 **행정심판 운영 개선**
  - 사건 진행상황 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로 위원회 신속 상정 추진
  - 신중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구술심리 및 주·부심 지정 사건 확대
    - ※ 주부심 지정 555건/재결 983건(56%)('21) → 지정 409건/재결 716건(57%)('22) → **58%('23)로 확대 계획**
    - ※ 구술심리: 5%('21) → 8%('22) → **9%('23)로 확대 계획**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만료에 대비한 신규 위원 위촉 추진
    - ※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 예정인원: 총 9명(3월 4명, 11월 5명)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 인지도 확대를 위해 자치구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주민 접점장소 중심 홍보 실시
    - ※ 국선대리인 선임현황: '21년(선임 4건/신청 16건), '22년(선임 18건/신청 19건)
- 불합리한 관행개선·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행정심판 주요사례 전파공개**
  - 인용 반복되는 심판 사례 자치구 전파,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에 주요사례 수시 공개

### □ 향후일정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해촉 : '23. 3월~
-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수시 공개 : '23. 3월~

### 3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운영

무료 법률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

#### □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수요에 맞게 이용 가능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적극적인 개선과제 발굴·제도개선을 통한 법률상담의 품질개선

#### □ '22년 추진실적

- '22년 시민법률서비스 실적은 총 21,863건으로 전년 대비 2,288건 증가

(단위 : 건)

구분	계	마을변호사	사이버법률상담	마을법무사	이웃분쟁조정센터
2021	19,575	14,483	2,528	891	1,673
2022	21,863	15,162	3,491	1,587	1,623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에 따라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무사 대면상담 원칙으로 환원('22.5월)

#### □ '23년 추진계획

- **(마을법무사 확대)** 동주민센터 수요조사로 마을법무사 추가 배정
  - 각 동별 수요조사(상반기)로 마을법무사 사업 참여 주민센터 확대
  - ※ 수요조사 후 확대할 주민센터와 마을법무사 수 최종 결정(약 40명 추가 예정)
- **(실무협의회 개최)** 민원·현장의견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불친절 민원 유발 변호사·법무사 개선기준 및 재위촉 기준 구체화 등 논의
- **(유공자 표창)** 공익활동에 대해 표창장 수여하여 자긍심 고취
  - 친절상담 등 활동이 우수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에게 표창장 수여
  - ※ '23년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자 50명 표창 예정

#### □ 향후일정

- 마을변호사·법무사 실무협의회 개최 : '23. 2월 중
- 마을변호사·법무사 유공자 표창 : '23. 12월 중

**참 고**

**시민대상 법률서비스 개요**

구 분		마을번호사	사이버법률상담	마을법무사	이웃분쟁 조정센터
목 적		체계적·지속적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및 전문 법조인의 사회 공헌 참여		생활법률 상담 (등기·임대차)	조정과정을 통해 갈등 해결
대상 시설		25개 자치구 쏬주민센터 425개	사이버상담	24개 자치구 179개동	시청 별관1동
운영일		동별 지정일자 (매월1~4회)	매일	동별 지정일자 (매월1~2회)	전화상담 후 대면조정
운영방법		방문상담 원칙, 전화 병행	市 홈페이지 활용	지정일 전화 및 방문상담	전화상담 후 대면조정
전문가 pool		市공익변호사단(1,020명)		마을법무사단 (209명)	조정전문가 (34명)
추진 실적	'21년	14,483건	2,528건	891건	1,673건
	'22년	15,162건	3,491건	1,587건	1,623건

## 4

# 적극적 법률 자문체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체계적·전문적으로 법률지원하여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 신뢰도 향상 및 법률적합성 제고

### □ 추진방향

- 법률전문인력을 통한 소송사건의 체계적 수행 및 효율적인 송무지원
- 전문인력을 활용한 선제적 법률 자문 및 계약 심사로 리스크 감소

### □ '22년 추진실적

- 소송수행 현황 : '22년 **승소율 80.3%** (단위 : 건)

구 분	총 수행 건 수			판 결 확 정				진 행
	계	이 월	신 소	계	승 소* (승소율 %)	패 소	기타**	
2022	1,328	860	468	543	362 (80.3)	89	92	785
2021	1,273	699	574	413	292 (75.5)	95	26	860

\* 승소 기준은 소취하화해·조정 등을 포함하여 소가 기준 50%이상의 일부 승소를 포함

\*\* 기타는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이송 등

### □ '23년 추진계획

- 정책수립 단계부터 **사전적 법률 자문**을 거쳐 **업무의 적법성 제고**
  - 도시계획시설 지정, 민간위탁, 인허가, 보조사업 등 관련 법률자문 실시
- 계약·협약 체결 전 **법률·회계적 적정성 심사**로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시의 법적·재정적 리스크 관리**
  -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관련 MOU 사전점검 매뉴얼 분기별 부서 배포
- **소송업무의 통합 수행**('16.1월~)으로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
  - 법률지원담당관 소속 법률전문인력이 市 소송수행 전담하여 체계적 대응
  -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 부당한 패소 방지

\* 총 14건(민사 5건, 행정 9건) 진행 중('23.2.10. 기준)

### □ 향후일정

- 시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대응을 위한 법률지원 : 연중 상시

### 3. 효율적인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① 주요 재정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

② 지방채 적정 발행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

③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

# 1

## 주요 재정사업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 추진방향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대규모 투자, 물품 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집중 관리

### □ 추진목표

-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의 62.1% (24조 2,082억원) 집행  
< 2023년 상반기 서울시 신속집행 목표 >

(23.1.16.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대 상 액	목 표 액	목 표 율
계	918,145	390,137	242,082	62.1%
市 본 청	515,965	271,218	175,478	64.7%
자 치 구	278,233	73,142	40,740	55.7%
공 기 업	123,947	45,777	25,864	56.5%

### □ 추진내용

- (대규모 투자) 50억원 이상 투자사업 2.7조원의 65% 집행  
※ 긴급입찰, 선금급 지급 확대(최대 80%) 등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제도 적극 활용
- (공 공 구 매)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 2.7조원의 60% 이상 집행
- (민 간 지 원)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 3.2조원의 60% 집행
- (타기관 지원) 신속집행 효과 지역체감도 제고 위해 자치구, 공사·공단 지원 예산 19.5조원의 65% 조기 지원

### □ 향후일정

- 기관별 집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별 점검 : '23. 2월~
- 상반기 신속집행 기관 성과평가 : '23. 7월

## 2

# 지방채 적정 발행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적정규모 지방채 발행 및 만기도래 지방채 적기 상환으로 투자사업  
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추진

### □ 추진방향

- 사업별 소요를 고려한 지방채 적기 발행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추진상황, 재원소요, 채권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채 발행
- 전략적 지방채 운용으로 채무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재정건전성 유지

### □ '23년 추진계획

✓ 발행규모 : 1조 8,490억원 ('22년 2조 4,816억원, 감 6,326억원)  
✓ 상환규모 : 2조 1,629억원 ('22년 1조 3,585억원, 중 8,044억원)  
⇒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많아 '22년말(11.9조원) 대비 채무잔액 3,139억원 감축 예정

- (발행) 채권금리, 사업공정별 실소요액 등 종합 고려하여 탄력적 발행
  - 차입선 : 금융시장 동향분석으로 낮은 금리 차입선(모집공채 등) 엄선
  - 차입기간 : 상환 도래시기의 재정부담 등 감안하여 만기 구조 분산
  - 발행규모 : 사업공정, 자금 수급상황 등 점검 후 실제 소요액만 발행
- (상환) 만기도래액 적시 상환, 감채여력 확보 및 조기상환 검토
  - 만기도래액은 차질없이 상환, 순세계잉여금 등 적립으로 채무감축 여력 확보
  - 채권금리 추이, 채무잔액의 이자조건 등 감안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검토

### □ 향후일정

- '23년 지방채 발행 및 관리계획 수립 : '23. 2월
- 지방채 발행 및 상환 : '23. 2월~12월

### 3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모금 홍보, 답례품 선정 등 추진

### □ 제도개요

- 개인(법인 불가)은 주소지 외 지자체(광역시, 기초)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활용
- 기부자에게는 답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기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답례품) 기부금의 30%(최대 150만원)를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세액공제)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  
 ※ 연간 1인당 최고 500만원 / 세액 공제부담(국세90.9%, 지방세9.1%)

###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2.12.30.)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답례품 종류 및 선정위원회 구성, 기금 설치·운용 등 규정
-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및 답례품 선정 ('22.12.23., '23.1.17.)
  - (지역사랑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 (입장권) 시티투어버스, N서울타워, 한강유람선 / (농산물) 경북궁쌈, 황실배 / (서울상징 공예품) 경북궁자경전 꽃담스카프 등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추진 ('23.1.~)
  - 市 홈페이지, SNS, 영상매체(지하철, 지하상가 등) 등 홍보 개시





## □ '23년 추진계획

- (제도·모금 홍보) **홍보매체 다변화, 타깃홍보로 기부문화 조성 및 유인**
  - 타 지자체와 공동 홍보문구 표출, 리플릿 공동 전시 등으로 상호 홍보
    - ※ 포괄적 우호교류협약 지자체 69개('23.2월 기준)
  - 서울 출·퇴근 수도권 거주자 대상 대중교통 광고매체 활용 홍보 추진
    - ※ 수도권거주자 기부희망지역\* (1위) 서울(15.1%), (2위) 강원(14.4%), (3위) 전남(13.3%)
    - \* 출처 :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 (서울시, '22. 9월)
- (답례품 선정) **정기적 기부를 유인할 매력적인 답례품 추가 발굴**
  - 답례품 선호도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기부자 선호에 맞는 답례품 확대
  - 서울의 풍부한 역사·문화·예술 등을 활용한 체험·관광형 답례품 등 추가
- (기금사업 발굴) **기부자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 개발**
  -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22.9.) 결과를 토대로 부서 간 협업, 타 시도 및 외국사례 조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 발굴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을 발굴하되 기존 사업과의 중복 지양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 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총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 사업 추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 향후일정

- 제도·모금 홍보 및 답례품 추가 선정 : '23. 2월~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23. 3월 중
- 기금사업 발굴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 '23. 2월~6월

## 4. 인구변화 대응 및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①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시정 전략 마련

---

② 미래 공공기여의 전략적 용도 선정체계 마련

---

③ 노후 저활용 시유자산의 선제적 활용방안 마련

---

# 1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시정 전략 마련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분석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인구변화 대응 전략 수립

## □ 추진방향

- 2050년 미래서울 예측을 기반으로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중장기계획 수립
- 인구학적 관점에서 정책 타당성을 점검·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 □ '22년 추진실적

-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한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초안 마련**
  - 서울연구원 및 부서의견 조회('22.11월~12월),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22.12월)
-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 추진**
  - 제도화를 위한 정책연구('22.2월~9월) 및 시범적용('22.10월~'23.2월)
  - \* 정책·계획·사업 등의 수립·시행에 따른 인구구조와 시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과 대안 제시

## □ '23년 추진계획

- 인구변화 대응 중장기 전략을 담은 **시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5개년) 수립**
  - 저출생·고령화 등 기존 실·본부·국별로 분산된 인구정책 체계화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중심으로 전략 및 과제 조정 후 계획안 심의·확정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핵심과제 이행상황 점검으로 계획의 실행력 제고
- 인구학적 관점의 정책 평가·환류 체계로서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 사업부서 자체평가 방식에 의존한 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제도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인구영향평가 수행 검토
  -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 보완하여 정식 도입안 마련

## □ 향후일정

- 서울특별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 '23.3월
-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정식 도입 : '23.하반기

## 2 미래 공공기여의 전략적 용도 선정체계 마련

市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시설을 발굴하고, 공공기여(토지·건축물·현금)를 활용한 시설 도입 방안 마련

### □ 추진방향

-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도시경쟁력 강화 주요시설 발굴
- 기부채납 공공기여(토지·건축물·현금)를 활용한 주요시설의 설치·제공, 용도 선정체계 마련 등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 추진내용

- 미래 공공기여에 대한 수요·공급 관리
  - (현행) 전산 시스템(UPLIS)을 활용, 생활 편의시설 위주의 상시 수요조사
  - (신규) 市 필요 주요 시설을 발굴하고, 민간 개발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규모 공공기여 예상지 조사
- 공공기여를 활용한 주요 전략 시설 공급 방안 제도화
  - 주요 시설 설치 필요성 체계적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도입
  - 市 종합적 시각에서 주요시설의 입지, 규모, 적합한 공공부지 및 운영 주체 등을 선정할 수 있는 실행방안 마련
    - ※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효율적 실행방안 구상
  - 전략적 용도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행정1·2부시장 주재회의 활용

### □ 향후일정

- 주요 시설 및 대규모 공공기여 대상지 조사·발굴 : '23. 2월 ~
- 주요 시설 선정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 '23. 하반기

### 3 노후 저활용 시유자산의 선제적 활용방안 마련

활용도가 낮은 공공자산을 발굴하여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 추진배경

- 공공서비스 확대·세분화로 시민 요구는 지속 증가 추세이나 가용 시유지 부족하여 적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
- 노후·저활용 자산에 대한 자료 구축, 활용 가능 자산 발굴, 미활용 자산의 활용방안 모색 등으로 시유자산 활용방안 제고 필요

#### □ '23년 추진계획

- 노후·저활용 시유자산 발굴 및 활용성 분석
  - 법정 용적률 대비 활용도 낮은 시유토지, 정책수요 변화로 미활용되는 자산 등을 발굴하여 토지 활용 가능성 재점검
  - 활용 가능성이 높은 토지(활용), 장래 활용성이 높은 토지(비축), 활용성이 낮은 토지(교환·처분) 등으로 유형화하여 관리
- 활용도 제고 대상 선정(재산관리관 협의) 및 활용방안 구상
  -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 시범선정(1~2개소)하여 전문 기획·검토를 통해 활용방안 구상(안) 구체적 제시
- 향후 행정수요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노후·저활용 시유자산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향후일정

- 활용방안 구상 대상지 선정 : ~ '23. 4월
- 시범선정 대상지 활용구상(안) 제시 : ~ '23. 8월
- 활용 가능 시유자산 지속 발굴(자료 추적) : ~ '23.12월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기획조정실

#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59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59	31	24	4	-
	시정·요구사항	28	9	17	2	-
	건의사항	15	6	7	2	-
	기타(자료제출 등)	16	16	-	-	-

# 시정 요구사항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함.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중</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비용 회수 착수·처리기한 설정 등 회수방안 구체화</li> <li>- 소송비용 미회수 사유 구체화</li> </ul> </li> <li>○ '22년 행감 이후 79백만원 회수(49건, '22.11월~'23.1월)</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촉고지서 발송, 민사집행절차 실시(고액 체납자 순) : '23년 중</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수탁연구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활용률이 낮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미반영 연구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연구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수탁과제 연구결과는 계획수립, 기초자료·업무참고, 법령개정·제도개선, 홍보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li> <li>○ 연구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음</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 수립 : '23.2월</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최근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교통공사와 주택공사 등 2023년 공사채 발행 예정인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재정압박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 지방공기업 채무관리 강화방안('22.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공사채 신규 발행 최소화 및 신규사업 하반기 추진 독려</li> </ul> </li> <li>○ 공사채 발행 제한에 따른 재정 안정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공사 :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행은 불가피하므로 해당 건에 대하여는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되, 요금인상 및 재정지원 검토 등을 통하여 안정적 재정 운영 관리 예정</li> <li>- 주택도시공사 : 당기순이익 발생 기관으로 재정상 어려움은 없으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금조달시기 조정 등 자금수급계획 관리로 적정 유동성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li> </ul> </li> </ul> <p>* 공사채 발행 예정 기관 : 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 공사채 발행(상반기) 협의 : '23.2월~3월</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 별빛 신사리 르네상스 사업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상권활성화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 지침은 법률상 소급 불가능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지침의 법적 위배 가능성 검토 및 불합리한 예산 지원 중단 재고 필요함 (소상공인정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 당시 관악구는 지방비 전액을 구비로 편성한다는 약속서를 제출하였음</li> <li>○ 지침의 소급적용은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임</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권르네상스 사업 이외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검토</li> </ul>
<p>5. 비효율적이거나 필요 없는 위원회 정비가 필요해 보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보하여 위원회 기능 및 운영의 효율적·지속적 정비가 필요함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도모 위해 위원회 전수조사 통한 전반적 운영 활동 평가 분석 중 - '22년도 위원회 전수조사 공문시행('22.12.16.)</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운영실적 저조 등 실효성이 감소한 위원회, 기능 중복 위원회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23.3월~4월)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나갈 계획임</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6. 위원회 출석률을 살펴보면, 재적의원 과반수를 겨우 넘긴 위원회가 대다수임. 위촉된 위원들의 책임감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석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참석률 제고 등을 포함한 위원회 개선계획 마련을 위해 '22년도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중에 있음. 또한 조례 등에 위원 출석률 제고를 위한 조항 신설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임.</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개선계획 마련 및 위원 출석을 관련한 조례 개정 추진</li> </ul>
<p>7. 대림역 일대는 G밸리, 여의도 금융 중심 등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도심물류 창고 등이 들어오는 것은 지역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공공자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내 도심형 물류창고('22.2월) 및 SBA 국제유통센터 도입 등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조사(~'23.2월) 진행 중에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성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기존 사업계획 종합 검토 예정</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8. 신당역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등의 채용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문제가 있어보임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개정 완료 : '22.12.27.</li> <li>-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를 결격사유에 포함</li> <li>○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기관별 인사규정 등 정비 요청 : '23.1.19.</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인사규정 등 개정 절차 진행 : '23.2월~</li> <li>○ 기관별 정비 완료 여부 확인 : '23.6월</li> </ul>
<p>9. 마을변호사 중에 불친절하면 해촉을 하고, 상담 만족도가 높으면 인센티브를 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해 보임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변호사 제도 자문 기구인 실무협의회를 활용하여 불친절 변호사 등에 대한 해촉기준 마련 등을 검토 중임</li> <li>○ 친절한 상담 등 활동 실적이 우수한 마을변호사를 매년 표창하고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협의회 개최 : '23. 2월 중</li> <li>○ 마을변호사 표창 : '23. 12월 중</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0. 납세자 보호관을 법무담당관이 겸직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은 것이 아닌지 검토바람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은 납세자보호관 1명과 이를 보조하는 세무공무원(세무6급) 1명을 두고 있음</li> <li>○ 우리시는 시세의 대부분 [9개의 시세 중 7개(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을 자치구에 위임 징수하고 있어 위임 시세에 대한 고충민원은 처분청인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먼저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li> <li>○ 서울시 납세자보호관은 서울시 부과·징수 시세에 대한 민원, 자치구의 민원처리 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나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있는 민원을 처리(서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하고 있어 현재의 업무처리 분량은 겸직이 가능한 수준임</li> </ul> <p>※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시에서 직접 징수</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1. 납세자 보호와 관련된 세무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함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li> <li>○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임용하여 납세자보호관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음</li> <li>○ 또한,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 담당으로 세무직 공무원(세무6급)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음</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후 업무량 증가 등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음</li> </ul>
<p>12. 전임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대북 관계 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남북협력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국(局) 단위 조직이었던 남북협력추진단을 과(課) 단위로 축소('22.8.19.)하였고,</li> <li>○ 업무 또한 북한이탈주민 및 이산가족 지원 등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하였음</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3.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민간위탁(마을공동체 사업 등)은 사업 개선이 필요해 보임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b>추진상황 : 추진완료</b></p> <p><input type="checkbox"/> <b>추진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적격성 심사 강화('21.9월~'2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운영방식 전환 및 통·폐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61개 사무 종료·운영방식 전환 완료('22.12월)</li> </ul> </li> <li>- 인건비·운영비 과다 편성 방지 등 사업비 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지침 개정(인건비 50% 이내 준수)하여 예산심의 강화</li> <li>- 종합성과평가 75점(기준 60점) 미만 수탁기관 재계약 배제</li> <li>-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 방지 기준 명확화(가족관계, 3년 이내 재직 등 이해관계자 위원회 참여 제한)</li> </ul> </li> <li>○ 채용 공정성 강화 등 수탁기관 부패 예방('21.10월~'22.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 금지, 가족·근무경험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심사위원 참여 제한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li> <li>- 중대재해 발생, 사업비 횡령, 채용비리, 성희롱 등 주요 비위행위 발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협약 해지 가능</li> <li>- 재계약 10년 초과 시 공개모집 전환, 동일 기관 장기수탁 제한</li> <li>- 종합성과평가와 같은 해에 별도로 특정감사 실시 가능토록 개선</li> </ul> </li> <li>○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21.10월~'23.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성과목표 수립(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의무화 및 사무별 핵심성과지표(KPI) 관리</li> <li>- 지도점검 계획 수립(매년 1월) 및 연 2회 이상 실시(연1회→2회)</li> <li>- 지도점검 결과 사업성과 미흡 시(성과 60% 미만) 예산 교부액 조정</li> <li>- 종합성과평가 시 감사 처분요구 사항 감점지표 신설</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사무 재구조화</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4. 투자출연기관 설립 관련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 부적정임에도 무분별하게 설립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에서는 출연기관 설립 시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른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행안부 검토의견을 보완·반영하였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설립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행안부 최종의견이 있었음</li> <li>○ 그동안 투자출연기관 남설 및 인원 증원에 따른 비효율 등 혁신 필요성이 제기되어, 市 경영효율화 용역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별 혁신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22.11월~)</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기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겠음</li> </ul>
<p>15. 서울로 7017에 사단법인 마을이 개입되어 있음.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포함되어 검토할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로7017 관리운영 직영 전환('22.1월)</li> <li>○ 서울로7017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개('22.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임기제공무원의 위탁업체 컨소시엄 대표 겸임, 인건비 및 시설 보수 예산 낭비, 자격 미달 업체와의 계약체결 등 지적</li> </ul> </li> <li>○ 서울로7017 위탁업체 대표 수사 의뢰('22.9월 푸른도시여가국 → 관악경찰서)</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6. 장애인 콜택시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 일부 시간대는 이용이 어려움. 확대가 필요해 보임 (택시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퇴근 시간대 수요 집중으로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추진('22.1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콜택시 증차 추진(30대)</li> <li>- 단시간 운전원 추가 채용(72명)으로 취약시간 투입</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차 및 증원을 통한 지속적인 대기시간 단축 추진 : '23.3월~</li> <li>○ 휠체어/비휠체어 분리배차 체계화로 운영 효율화 도모 : '23.3월~</li> </ul>
<p>17.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사업평가 과정을 운영하며 위탁사업 선정에 엄중을 가했는데, 지금 와서 유독 특정 분야만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는 관행적으로 추진되어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시민 수요와 눈높이를 반영하여 사무 필요성 및 수행방식 적절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음</li> <li>○ 그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음</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8. 공무원 직접 학술용역은 최소한의 연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구결과의 활용률도 낮음. 최소한의 연구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연구보고서 작성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p> <p>(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가 자문 지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교육) 연구 진행 방법 논문 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로 연구보고서 질적 제고</li> <li>- (전문가 자문) 시 산하 연구원의 분야별 전문가를 연구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수시 연구 자문 및 지원</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 수립 : '23.3월</li> </ul>
<p>19. 예산 절감 성과급 지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p> <p>(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성과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증액(증 10백만원) 하였음('23년 74백만원)</li> <li>○ 성과급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하여 신청 증가를 유도</li> <li>○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시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 운영의 취지를 설명, 예산절감 노력이 충분히 보상되고 관심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심사 추진</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급 지급 계획 수립 : '23.2월 중</li> <li>○ 성과급 신청 및 심사 : '23.3월~4월</li> <li>○ 성과급 지급 : '23.5월</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0. 서울시 지속가능한 2030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가구 수 등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표 일부가 하향 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평가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li> <li><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4개 분과, 29명 위촉) 및 토론회 개최('22.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토론 및 향후 지속가능발전 업무 운영 방향 논의</li> </ul> </li> <li>○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성과지표 관리 등 강화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도 성과지표 실적 업데이트 및 달성현황 관리 추진</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 성과지표 추진현황 현행화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건의사항 논의 : '23.2월</li> <li>○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별 활동 : 분기별 1회 예정</li> </ul> </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1. 서울시가 직면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이에 서울시는 인구변화대응팀을 신설하였으나, 추진계획(시장방침)에 따른 실적이 부진함. 인구변화대응 전문가TF는 운영되는 8개월 동안 5차례 회의 개최에 그쳤으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되지 않고 있음. 인구영향평가 도입 등 향후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효과적인 행정력 투입이 필요함 (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2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행정1부시장(위원장), 전문가(TF위원 포함), 관련 실·본부·국장, 시의원 등 15명</li> <li>- (역할) 인구변화대응 기본·시행계획, 인구영향평가 제도, 인구정책 등 심의</li> <li>- (운영) 연2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제1차회의 개최('23.1.3)</li> </ul> </li> </ul> </li> <li>○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3월~9월)</li> <li>-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용역 추진(서울시립대, '22.10월~'23.2월)</li> </ul> </li> <li>○ 향후 인구영향평가 정책연구 및 시범적용 결과를 토대로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안을 마련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음</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영향평가제도 정식 도입안 마련 : '23년 중</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2. 시민참여 예산과 관련하여 공모가 7월에 끝났음. 평소에는 3월 이내에 끝났던 것이 많이 늦어졌음.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추진해서 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했음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에는 지난 10년간 성과 및 과제 검토, 개선 방안 도출에 기간이 소요되어 운영계획 수립('22.7월) 및 이후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추진된 바 있음</li> <li>○ '23년에는 2월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일정을 기한 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음</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3.3월</li> <li>○ 시민제안 공모 : '23.3월~4월</li> <li>○ 제안사업 심사 : '23.5월~7월</li> <li>○ 시민투표, 총회 개최 : '23.8월</li> <li>○ 예산안 제출 : '23.11월</li> </ul>
<p>23.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최초 과업지시서에 없던 기관 통폐합 내용이 4월 중간보고 이후 갑자기 확장되었음. 기관 통폐합까지 과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는 정식 지침 변경 또는 신규 발주가 필요함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 발주시('21.10월) 과업내용에 기관별 종합적 분석을 통해 동종·유사업무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 방안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li> <li>○ 이에 따라 기관 내 조정은 물론, 기관 간 기능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통폐합 방안 등도 연구가 가능한 범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업내용서 : 동종·유사업무(사업) 통폐합 등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li> <li>- 착수보고서 : 출연기관 기능의 중복·유사성을 검토하여 통폐합, 유지, 분할 등 대안 구성하여 효율성 제고방안 수립</li> </ul> </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24. 경제성 분석 결과 1 미만이지만 투자심사 통과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담당부서의 정무적 판단이 사업추진에 우선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개선방안이 필요함  
(재정담당관)

**추진상황 : 추진중**

**추진내용**

- 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B/C)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주민생활편익, 지역경제 파급효과, 소요자금 조달능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투자심사 통과 여부(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함
- 일부 청사·도서관·문화체육시설·주차장 건립 사업 등은 B/C가 1 미만이지만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편익 제고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었으며, 재원조달 가능 및 사업의 준비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통과되었음

- 최근 3년간('20~'22) B/C 1 미만 투자심사사업 90건 중 72건이 통과되어 통과율은 80%임

〈최근 3년간 B/C 1 미만 사업 투자심사 통과현황〉  
(단위 : 건, %, '22. 12월말 기준)

연도	B/C 심사건수*	B/C 1 이상 사업			B/C 1 미만 사업		
		심사건수	통과건수	통과율	심사건수	통과건수	통과율
계	115	25	23	92	90	72	80
2022	19	4	4	100	15	12	80
2021	39	5	4	80	34	27	78.4
2020	57	16	15	93.8	41	33	80.5

\* 市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전체사업에서 경제성 분석 (B/C)을 실시하고 투자심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건수 기준임

- 올해 3월부터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심사를 준비하는 사업부서 대상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업부서가 투자사업의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도록 지원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투자사업의 효과까지 제시하도록 하여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음

**향후계획**

-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제도 협의·운영 : '23. 3월~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5. 디지털재단 이사장 해임 소송 관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임명절차의 문제와 관련부서의 대응과 패소원인으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후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1월 디지털재단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패소 원인은 행정절차법 미준수*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시 임명절차 미시행**임</li> <li>* 해임처분 통보 시 처분의 구체적 사유, 후속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문서로 통보</li> <li>** 해임처분 의결 당시 참석위원 7명 중 내부위원 재정기획관에 대한 시장의 임명절차가 없어 의사정족수 미충족</li> <li>○ 이에 따라 '22.7월부터 내부위원(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인사발령 시 임명방침을 수립하고 있음</li> <li>○ 또한, 출자·출연기관 임원 해임 등 처분 관련 가이드를 주관부서에 배포하였음 : '23.1월</li> </ul>
<p>26.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에 참석률이 낮음. 실장의 참석률을 높여주시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22년은 코로나 등으로 서면회의가 다수 개최되었는데, 서면회의 안건이 전문가 자문이나 단순 서면보고 등인 경우, 일정상 부득이하게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함</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당연직 위원인 소관 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하겠음</li> </ul>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7. 과거 유사·중복 위원회가 지적이 되어 통폐합 추진중에 있음. 기획조정실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매년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폐합 또는 폐지 등 정비 추진중에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비 대상 위원회가 계획대로 통폐합, 폐지 및 비상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하겠음</li> </ul>
<p>28.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해서 인사 가산점 부여 등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임 (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실적가점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실적가점, 가산점 등은 승진에 직접 반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 필요</li> <li>- 실적가점 평가시 공무원 직무발명 현황을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음</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반기에 직무발명 명단을 소속기관에 통보</li> <li>○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및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행정포탈·상담·보상심의회 등에서 보상금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안내</li> </ul>

#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1. 현재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함. 추가적으로 자녀 많이 갖기 등 캠페인·홍보 필요함 (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시정 전반에 걸친 인구변화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임</li> <li>○ 급격한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초저출산 대응 전략 등을 포함하여 인구변화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 '23년 상반기</li> </ul>
<p>2.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다자녀 출산 직원에 대한 승진 가점 등 강력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함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시는 자격증, 특수지 근무경력, 실적가점 등 가산점 제도를 운영 중이나 다자녀 출산직원에 대한 가산점은 미운영</li> <li>○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공공부문의 선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li> <li>○ 다만 가산점 추가는 승진에 직접 반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 필요</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출산직원 가산점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 '23년 상반기</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3. 마을변호사·법무사 사업이 비대면 상담 중심으로 추진되어, 예산 집행률이 낮음. 집행률을 높여 주기 바람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상담방식을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원칙으로 전환한바('22. 5.23. 字), 6월 이후 예산 집행 규모가 이전에 비해 높아짐*</li> <li>* ('22.6월 이전) 141,669천원 → ('22.6월 이후) 232,610천원</li> <li>○ 또한 마을법무사(현재 177개동) 참여 동주민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므로 이에 따른 예산 집행률 상승 효과가 기대됨</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법무사 참여 동주민센터 확장 : 연중 상시</li> </ul>
<p>4. 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는 마을법무사 관련하여 성명 등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 제출된 요구자료에는 비공개가 되어 있음. 공개가 필요함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이 되는지 법률 검토</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법무사 명단 공개에 관한 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 향후에 명단을 공개하겠음</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	------

5.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됨.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임. 홍보 및  
 준비에 차질 없도록  
 바람.  
 (재정담당관)

추진상황 : 추진중  
 추진내용

- 홍보
  - 市 홈페이지('22.12.19.), 트위터('23.1.3.), 카카오토리(1.4.), 페이스북(1.5.) 게재완료
  - 서울페이+앱 공지사항 노출(1.5.)
  - 市 보유 영상매체 홍보문구 표출(1.25.~)

영상				문자	
시청사 시민 게시판	지하철 역사 미디어 보드	우리은행 객장TV	서울시 지원시설	지하상가 문자전광판	지하철 문자전용 모니터
1면	10면	24면	100면	30면	7,800면

- 전동차 내부 광고(4호선 모서리 광고 470면, 9호선 액자 광고 84면, 2월 셋째 주~) 게재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 답례품 품목 선정('22.12.23.) : 서울사랑상품권, 입장권, 서울 상징 공예품, 농산물
  - 서울사랑상품권 등록('23.1.1.)
  - 서울사랑상품권 외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1.5.~1.13.)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1.17.)
    - (입장권) 시티투어버스, N서울타워, 한강유람선(3종/4개업체)
    - (서울상징공예품) 경북궁자경전꽃담스카프, 전통물감 컬러링키트 채색상자 '창덕궁에디션'(2종/2개 업체)
    - (농산물) 경북궁쌀, 황실배(2종/2개 업체)
  - 답례품 공급업체 협약 체결 및 추가 선정 답례품 공급(1.20.~)

향후계획

- 제도·모금 홍보
  - 타 지자체와 공동 홍보문구 표출, 리플릿 공동 전시 등으로 상호 홍보
  - 수도권 거주자 중 서울 통근자 대상 대중교통 광고매체 활용 홍보 추진 예정
- 답례품 추가 선정
  - 기부자 선호도 및 기부금 추이 파악하여 답례품 추가 검토(연중수시)
  - 서울의 풍부한 역사·문화·예술 등을 활용한 체험·관광형 답례품 등 추가
- 기금사업 발굴
  -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조사('22.9.) 결과를 토대로 부서 간 협업, 타 시·도 및 외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기금사업 발굴 추진 중
  - 상반기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예정

건의사항	조치결과
<p>6. 투자출연기관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고객만족도는 높게 나오는데도 내부만족도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음. 조직문화의 경직된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되므로 내부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내부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21년~)</li> <li>- '21년 결과 기반 '22년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 '22.3월~4월</li> <li>- '22년 결과 기반 '23년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 '23.2월</li> <li>○ 내부만족도 저조기관 대상 진단 워크숍 개최('22.11월)</li> <li>- 대상 : 5개 출연기관 인사관리 실무담당자</li> <li>- 내용 : 만족도 조사결과와 연계하여 직원의견 공유 및 내부만족도 제고방안 워크숍 개최</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기관별 내부만족도 조사 진행 : '23.4월~7월</li> <li>○ '23년 내부만족도 저조기관 대상 워크숍 추진 : '23.9월</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7. 서울시 본청의 부채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감축을 위한 관리계획 마련이 필요함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관리 필요 지표는 부채가 아닌 채무로서, 채무규모 증가세 억제를 위해 중점 노력중임</li> <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부채</b>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그 이행에 미래 자원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채무·임대보증금·선수금 등)</li> <li>• <b>채무</b>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 (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 등)</li> </ul> </li> <li>○ 서울시 재정진단·중장기 재정전망·재정건전성 개선방안 및 추진과제에 대한 연구 후 중장기 채무·부채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명 :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li> <li>- 주요내용 : 서울시 재정진단, 중장기 재정전망, 재정수지 전망에 따른 채무·부채 관리·개선방안 마련 등</li> <li>- 연구기간 : '23.1월~9월 (9개월)</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 : '23.1월~9월</li> <li>○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 : '23.10월~12월</li> </ul> </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8. 서울시 지속가능한 2030 의제가 부진하지 않고, 향후 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함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4개 분과, 29명 위촉) 및 토론회 개최('22.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토론 및 향후 지속가능발전 업무 운영 방향 논의</li> </ul> </li> <li>○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성과지표 관리 등 강화하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도 성과지표 실적 업데이트 및 달성현황 관리 추진</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 성과지표 추진현황 현행화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건의사항 논의: '23.2월</li> <li>○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별 활동 : 분기별 1회 예정</li> </ul>
<p>9. 서울기술연구원 최초 설립계획서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기관 통폐합이 조직 비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복합연구의 시너지 효과창출 및 시민의 삶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통합을 추진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사항('22.12.23) :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즉시 통합 추진</li> </ul> </li> <li>○ 통합연구원 출범 직후에는 조직 비대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자연감소 인력, 중복기능 재배치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하도록 하겠음</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 통합계획 수립 : '23.4월 예정</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10. 과거 유사·중복 위원회가 지적이 되어 통폐합 추진중에 있음. 기획조정실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매년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폐합 또는 폐지 등 정비 추진중에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비 대상 위원회가 계획대로 통폐합, 폐지 및 비상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하겠음</li> </ul>
<p>11.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해서 인사가산점 부여 등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임 (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실적가점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실적가점, 가산점 등은 승진에 직접 반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가점 평가시 공무원 직무발명 현황을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음</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반기에 직무발명 명단을 소속기관에 통보</li> <li>○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및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행정포탈·상담·보상심의회 등에서 보상금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안내</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12. 서울로 7017 슈즈트리 등 전임시장 당시 실효성 없는 일회성 전시행정추진 지적. 비효율적인 전시행정은 지양하기 바람 (공원여가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로 7017 개장 시('17.5월) 재활용 신발 3만여 켤레를 활용한 슈즈트리 설치로 인해 흉물과 예술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2022.1.1.부터 재정·인력의 효율적 감축과 시민수요에 집중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관리체제로 전환·운영</li> <li>○ '달려라 피아노' 등 시민 자율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로 7017 방문 시민이 원하는 쾌적한 보행·휴식공간으로 관리운영 집중 : 연중 상시</li> <li>○ 시민 자율 참여 위주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연중 상시</li> </ul>
<p>13. 투자출연기관 사내대출 관련 기관별 금리 및 상품이 제각각인데, 서울시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방안을 건의함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22.9월)」에 따른 투자출연기관 복리후생제도 점검 시행 : '22.10월~11월</li> </ul>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개선 이행 계획 제출 : '23.2월</li> <li>○ 기관별 개선 이행 여부 점검 : '23.3월~</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14. 50플러스 재단이 3년 연속 경영평가가 다 등급을 받으며 최우선 평가개선과제가 기관장과 임원으로 지적되는데, 개선이 안되고, 고위급 임직원에 특정 단체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함  (평생교육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플러스재단 경영효율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개편 완료(202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상·하조직 슬림화(3본부 20팀 → 2본부 12팀)</li> <li>- (사업) 중장년 일자리 중심의 사업추진 및 상담·교육 후속 일자리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전환지원본부+일자리사업본부 ⇒ 사업운영본부</li> </ul> </li> </ul> </li> <li>○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내부고객만족도 및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22.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승진제도 개선, 임직원간 신뢰 관계 확립, 업무시스템 개선 등 3개 분야 개선 과제 도출</li> </ul> </li> <li>○ 50플러스재단 내부고객만족도 및 조직문화 개선 지속 추진 및 성과 모니터링</li> </ul>

건의사항	조치결과
<p>15. 50플러스재단 북부캠퍼스에서 이용자들에게 통폐합 논의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단체문자를 발송했다는 정황이 있으나, 기관에서는 발송한 적 없다고 답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바람 (평생교육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문자 발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93건(168건,125건 / '22. 7.8.발송)</li> <li>- 발송비용 환수: 금7,590원 처리 완료</li> </ul> </li> <li>○ 향후, 요구자료 제출 시 오류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 후 제출</li> </ul>

#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최근 3년간 서울시 소송 승소 중 미회수된 내역 (법률지원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24. 제출 완료
2. 최근 3년간 서울기술연구원 수탁사업 현황 (창의행정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14. 제출 완료
3. 투자출연기관 성과급 급수별 소요예산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16. 제출 완료
4. 최근 5년간 위원회 현황 및 개최결과(제척/기피/회 피 사유 포함)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14. 제출 완료
5.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건수(개최일시 포함)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7. 제출 완료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6. 2020년, 2021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수당 지급, 총액 700만 원 이상 건수, 세부지급내역 및 검토보고서 일체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1.18. 제출 완료</li> </ul>
<p>7. 2019~2021년 모든 위원회(본회의, 분과회의, 서면회의 등) 출석률 제적 50% 미만으로 개최된 회의 상세내역(회의시간, 내용, 수당 지급 내역, 참석 인원 등)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2.8. 제출 완료</li> </ul>
<p>8. 최근 3년간 공공기여 내역 (공공자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1.14. 제출 완료</li> </ul>
<p>9. 투출기관 경영효율화 재무건전성 제고 관련 상세자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1.14. 제출 완료</li> </ul>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0. 2022년도 국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14. 제출 완료
11. 서울시 보증채무, 직접채무 관련 자료 (재정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24. 제출완료
12.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관련 학술용역변경 지침, 과업변경 지시 관련 자료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14. 제출 완료
13.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평가, 위원선정경과 및 추진보고서 (재정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24. 제출완료
14. 2019년~2022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명단, 임명절차 및 위촉장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14. 제출 완료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15. 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임명절차 관련            임명·위촉의 근거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1.14. 제출 완료</li> </ul>
<p>16. 서울시 소관            민간위탁, 대행사무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대행 사무                관련 시설현황,                소유주체 구분</li> <li>-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작물, 기계 및                기구현황과 공유재산                대장 등록여부</li> <li>- 위와 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공제가입                현황(가입주체,                가입금액, 보험료                현황)</li> </ul> <p>(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1.29. 제출 완료</li> </ul>